

07 재난 안전

1. 코로나19 사태에 기인한 전북 안전부문 현황

임승현 연구위원_지역개발연구부

코로나19 대응 개요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pandemic)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라북도도 즉각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을 통해 코로나19에 강력히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 행정역량을 총동원한 최고의 수준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자체 구성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런 초기단계에서 전북이 취한 강력한 대응조치의 효과로 코로나19 사태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31일 전북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6월 24일)까지 전북 전체에서 24명 대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어 전북지역은 코로나19에 대해 체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용한 전파를 통해 지역사회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전파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더 확실한 안정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도정 전 분야에서 대응의 고삐를 더욱 조이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안전부문 대응 진단

전북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경로를 철저히 파악하고 획득한 정보와 상황 변화에 맞는 사회·물리적 방역 수단을 총동원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투입·활용으로서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는 주요 전파경로가 중국 방문자와 중국인 입국자로부터 감염되는 1차 전파 단계에 맞게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가동했으나 이후 전국적으로 2차, 3차 감염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지역사회전

파를 차단하는 방역체계로 적기에 전환하여 신속 대응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lock-down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재택근무 확대, 사이버개학 등 긴급 행정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전역에서 밀접 접촉을 방지하고 유동인구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조기차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한 접촉차단 방식의 생활방역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가정폭력이나 사이버 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종교와 문화생활이 차단되고 유흥업소 출입 등이 제한됨으로서 생활고가 가중되고 욕구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이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일자리나 소득 상실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 가족 간의 불화나 가정폭력이 증가할 수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 대책을 적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 추진현황

해외입국자 수송대책

해외로부터 입국한 국민과 외국인에 의한 지역사회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북지역으로 유입하는 입국자를 출발지인 공항에서부터 거주지까지 철저히 이동 격리시키고 있다. 공항전용버스를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부터 전주 월드컵 경기장까지 이동 후 준비된 전용차량으로 각 시군의 자체격리시설로 수송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자가 격리시키고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 이동 중에 해외입국자 전용쉼터로 지정된 졸음쉼터에서 1회 정차하는 방식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입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수송대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4월 4일) 총 493명의 해외입국자를 수송하였으며 별도로 도내 유학생 및 어학연수자도 총 25명을 중점관리하고 있음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전북도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은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전주시(건지하우스), 군산시(청소년수련원), 익산시(왕궁온천) 등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입소자는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양성 확진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입국 국가별 입소자 현황은 현재(4월 4일 기준) 동남아(206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럽(62), 미국(56), 중국(21), 일본(11) 등 이며 기타 국가도 46명에 이르며 입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전주(153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85), 군산(69) 순이며 진안(2)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외 군산시 베스트웨스턴 호텔(34실)과 전주시 자가격리자를 위한 안심숙소(호텔 6개소)를 지정 ·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료 감면(30%)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양성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일반인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을 자가격리조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1:1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자가격리자 1:1 전담공무원 지정, 유선 및 '앱' 모니터링, 특이사항 발생시 관련기관 공조체계 구축 등이 있으며 관리조직은 전북도청의 전담부서와 보건부서를 비롯하여 경찰 및 소방과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현재(4월 4일) 자가격리자는 총 548명으로 일반(43)과 해외입국(505)으로 구분되며 격리업무에 투입된 전담공무원은 총 1,935명으로 총괄요원(32), 모니터링 요원(548), 예비자(1355)로 구성되었다.

전북도차원에서 격리 이탈자 발생시 대응절차를 마련하여 신속조치토록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는 내국인 위반자의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생활지원금 배제 등의 추가조치를 예고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출입국관리법) 등 초강력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총 13,414개의 집단감염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명령을 시행(3월 22일~4월 5일)하였고 시행에 따른 명령준수여부 현장점검 등 단계별 후속 조치를 단행하였다. 특히, 전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전개 및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청 주변 일반음식점 야간 홍보활동을 통해 소독제 배부 및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지도하였으며 도시사가 직접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투사하고 있다.

집단감염 위험시설 현장 점검

집단감염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명령을 시행한 이후 명령준수여부 현장점검을 시설유형별 표본점검과 전수점검(개신교회)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표본점검 대상 9,039개소 중 휴업한 업체는 전체의 51%인 4,973개소에 이르며 고용감소가 총 221명으로 조사되었다.

개신교를 제외한 기타 종교시설은 집단적인 종교 활동을 자진 중단하고 있으나 일부 개신교는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 및 권고를 통해 자진 예배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실시한 개신교 점검 결과 예배 운영 개신교회는 전체의 46.7%인 1,707개소로 조사되었다.



2. 포스트 코로나19, 안전부문 글로벌 트렌드 전망

포스트 코로나19, 국제적 전염병 검사 및 방역체계 변화

혁신적 전염병 방역체계 등장

코로나19 사태를 맞고 있는 국제사회는 감염자 조기 확인을 위한 대규모 검사와 검사과정에서 2차 전파 차단을 위한 혁신적인 방역체계를 도입하였다. 선별진료소나 드라이브 스루, 오픈 워킹스루 등과 같은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검사방식을 도입하여 초기단계에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과정에서 2차 전파를 방지하는 등의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이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전염병 검사의 국제적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전염병 검사방식은 K-방역으로 전 세계의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일반화

전염병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세계 각국 정부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일찍 귀가하여 불필요한 대인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 등산 등의 동호회나 친교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전염병의 집단발병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각국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반인의 생활영역뿐만 아닌 직장인의 사무이나 생산 활동까지 확대됨으로써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지역사회의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유흥 및 레저부문의 다중밀집사업장(찜질방, 영화관등)에 대한 영업 일시중단 조치 등을 통해 확진자의 대량 발생을 차단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향후 전염병 방역체계의 핵심 정책으로 보편화될 전망이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나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상실로 가정경제파탄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난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정책이 병행해서 추진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전염병관련 물품제조유통 및 의료산업의 일대 전환

필수방역·의료물품의 제조 및 유통체계 변화

마스크, 살균소독제, 항균필터 등 필수방역 물품의 수요 급증에 따른 제조시설부족, 원료 및 완제품의 매점매석, 사기판매 등의 사회불안을 고조시키는 좋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마스크의 유통을 국가가 지정한 공적유통경로를 통해 공급하는 공적마스크판매체계를 도입, 국민 누구나 일정 수량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긴급히 마련·시행을 통해 마스크 공급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세계 각국은 ICT기반의 스마트 방역물품공급관리시스템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물품 외에도 생활필수품에 대한 국제적 공급 및 유통체계가 단절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함으로써 이들 물품에 대한 글로벌 공급체인의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즉, 생활필수품과 의료물품 등 필수재난물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 및 안정적 유통을 위한 자국 산업 및 유통구조에 대한 재편정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인 공공의료체계 강화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전염병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자국 내 필수 의료물품의 생산시설 부족, 국제적인 유통체계단절, 의료인력 및 시설의 부족 등으로 국가 또는 국제적인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세계 각국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보완 정책을 적극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과 인력 확충, 감염병 진단검사 및 진료체계 개선을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각국 정부와 WH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의료 장비와 기술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염병관련 의료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19, 국제사회의 재난안전공조체계 재정립

국제사회의 재난안전공조체계 재편

세계 각국은 해외로부터 전염병차단을 위한 국경폐쇄와 이동금지 등의 초강력 봉쇄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는 자국의 안전만을 우선하는 국수주의적인 조치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교류가 크게 경색 또는 단절되었다. 이로써 국가 간의 오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그 동안 잘 유지되어오던 국제사회의 재난안전에 대한 공조체계가 크게 손상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의 재난공조체계의 복원이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며 전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상호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조체계구축 방안을 적극 모색하게 될 것이다.

해외 거주 자국민 및 여행객에 대한 안전정책에 큰 변화 예상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국수주의의 발현과 인종차별적 혐오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해외에서 국민의 신변 안전이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었기에 국제적인 재난 상황에서 자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단대책이 추진될 것이다. 또한, 자국 내에서도 지역이기주의의 등장으로 전염병 관련 격리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특정지역 또는 특정인에 대한 집단적 혐오와 차별 사례가 나타남으로서 이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주민에 대한 치유대책도 마련될 것이다.

코로나19는 전염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닌 재난약자나 특정지역 사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증폭시켜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해외체류 국민의 신변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는 상황을 전 세계가 경험하게 되어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의 과격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도입하려는 국내외적인 노력이 증가하고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기구의 출범도 가능할 것이다.

3. 포스트 코로나19, 전북의 재난안전에 미치는 영향

포스트 코로나19, 재난안전에 대한 자치역량 중요성 및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

지역 재난 및 위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는 지역의 안전 및 위기관리시스템이 국내적 재난상황을 넘어 전 세계적인 재난상황까지도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또한 긴급재난안전지원, 집단감염시설관리, 자가격리위반자관리 등 지역차원 재난행정에 있어 지자체별 차별화된 대응에 따른 성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재난안전부문에 대한 자치역량강화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였다.

대규모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행정조치와 다양한 상황을 맞춰진 세밀한 정책결정,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 속에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스스로 자치역량을 총동원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건강하고 협력적인 지역공동체 우수사례와 실패사례를 비교·체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지역차원의 재난안전행정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게 되었다.

공동체 안전의식 고취 및 예방습관의 생활화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과 높은 치명률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위기 의식이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전염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수칙을 개인습관으로 생활화하는 행태들이 나타났다.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마스크 착용 및 기침 예절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양식을 일상으로 받아드리는 등 코로나19의 창궐은 도민 개개인의 전염병 예방습관과 지역공동체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포스트 코로나19, ICT기반 재난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확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동선정보 파악과 원활한 마스크 공급시스템 운영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었고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대응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그중에서 확진자 동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전국 구석구석을 커버하는 이동통신 기지국과 핸드폰 GPS위치추적시스템, 그리고 CCTV 통합관제망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도 전국 모든 약국에 기 구축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 Drug Utilization Review)가 있기에 가능했다.

이런 성공사례는 향후 다양한 ICT기반의 인프라 및 시스템을 연계·통합운영하여 보다 강화된 지역 재난 및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거나 기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사이버 강좌나 재택근무 등과 같은 비접촉 비대면(untack) 방식의 사회경제활동을 통해 전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보건안전산업이 성장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4. 포스트 코로나19, 안전부문 대응 방향

포스트 코로나19, 전북 재난안전 단계적 대응 방향

단기 대응방향

① 전염병 대응 분야별 성공 및 실패 사례집 제작

도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이송 및 치료, 확진자 동선파악 및 정보축적, 밀접접촉자의 확인 및 관리 등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환자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성공과 실패 사례로 구분하여 사례집으로 제작하고 이를 전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도민의 교육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별사례들은 시간이 지나면 내용을 상세하게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바로 검토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례집을 제작해야 한다.

② 전염병 대응 표준 매뉴얼 갱신 제작

전염병 대응 분야별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 분석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창궐시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매뉴얼은 대상 업무와 대상자에 따라 구분하는 등 사용자 맞춤형으로 갱신·제작되어야 한다.

중장기 대응방향

① 지역단위 재난위기관리시스템 도입과 운영고도화

전염병뿐만 아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하거나 급격히 확산되는 초국경적인 재난에 대해서 재난유형별 사전 대비 및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재난 및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면밀하게 추진해야한다. 현재 재난관리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범지구적 재난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협조체계구축, 책임과 역할, 행동지침 등 재난 유형과 발생상황에 맞는 혁신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코로나19 경험에 비추어 역학조사 및 재난정보제공 과정에서 적극 활용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GPS 및 GIS 등 위치정보기술, 사물인터넷(IoT), 5G통신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채택한 지역단위 재난 및 위기관리시스템의 고도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해야한다.

② 필수 재난물품시설 및 인력확보 방안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초대형 신종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필수재난물품 긴급 생산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연금품 모금과 관리운영, 재해구호물품 제작 등을 전담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전복권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 활동지원과 자원봉사자 단체관리·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부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피해자 지원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량의 필수재난물품을 평시에 비축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방재거점을 국가중요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규모 재난방재거점조성에 있어 전북도가 국책사업으로 발굴한 '서부권광역방재거점조성사업'을 시의성 있게 재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필수의료인력 및 시설확보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자가격리자 1:1 모니터링, 다중이용시설 관련시설 점검 및 지도단속, 예방을 위한 시설과 공간방역작업 등 재난행정업무와 이를 담당할 행정인력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같은 핵심시설의 확충과 감염병 대응 행정 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5. 소결

코로나19, 지역안전이 국가와 인류 전체의 안전에 큰 영향

지구적 측면에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병한 이후 전 세계로 급속하게 전파됨으로서 인류 전체의 생존에 큰 위협을 가했으며 국내적으로는 대구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창궐하여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됨으로써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런 코로나19의 확산 사례에서 우리는 지역의 안전이 국가의 안전뿐만 아닌 전 세계 인류의 안전과 직결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창궐로부터 전체 인류의 생존을 지키는 첫 번째가 주체가 지역사회임을 깨닫고 지역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수단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새로운 사회로 도약하는 혁신의 시발점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감염병 방역에 대한 표준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격리시설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수준 높은 공동체 의식이 되살아나서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하나 차별 없이 이성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주국가의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주었다. 더불어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GPS, 공간정보(GIS), 사물인터넷(IoT), 5G통신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코로나19 대응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듯이 세계 정상의 민주국가다운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이 고도로 융합된 국가시스템을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구축·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새로운 사회로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